

# “日 적반하장식 경제침략 멈춰라”

도의회, 아베정권 규탄대회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7일 도의회 청사 앞에서 일본의 적반하장식 경제침략 행위를 규탄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도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일본 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 및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과 가고시마현의회 등 일본 지방의회의와 교류 중단, 불매운동 동참 등도 선언했다.

도의회는 이날 규탄사를 통해 “과거 대한민국의 전 국토를 유린하고 자원과 노동력 착취, 침탈을 일삼았던 일본정부가 진정한 사과 없이 경제침략을 일삼고 있다”며 “앞에서는 한국을

“과거사 사과·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행해야”  
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제정 추진  
가고시마현의회 등과 교류활동도 중단키로

우방이라고 해놓고 뒤로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등 일본정부가 우리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특히 “일본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백색국가 제외,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역사적·경제적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인 수출 주력산업을 흔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아베정권의 경제침략 행위에 맞서 제2의 독립운동정신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면서 “도의회가 앞장서 전북도, 상공회의소 등 모든 기관과 연계해 일본의 경제침략으로부터 지역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면서 “일본정부의 비상식적이고 일방적인 경제침략행위와 역사왜곡

중단, 과거사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송성환 의장은 “도의회는 앞으로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산하기관들이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 구매나 용역·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전라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및 수의계약 제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며 “가고시마현의회와 이시카와현의회 등 도의회와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일본 지방의회의와 교류활동도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7일 전북도의회 입구에서 송성환 전북도의회장과 전북도의원들이 '일본은 무모한 경제침략행위를 즉각 철회하라'는 규탄대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대안정치, 충정이라면 공개검증을”

정동영 평화당 대표, “상임고문 중재안 받아야”



정동영 민주당 평화당 대표는 7일 당내 제3차 대대 구축 세력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를 향해 “TV토론이든 방송토론이든 당원토론이든, 국민 앞에서 답을 살리기 위한 대안정치의 안과 재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답을 살리기 위한 비전을 두고 공개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 이어 지난 5일 진행된 정 대표 측과 대안정치 측 의원 회동에서 대안정치는 정 대표에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비대위원장의 외부 인사 영입을 골자로 한 새로운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 대표는 이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상황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날짜를 정해준다면 언제라도 좋다. 국민과 당원이 보는 앞에서 평가하고 어느 쪽으로든 평가가 이뤄지면 양측 다 승복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평화당 내에서는 현 분열을 막기 위한 여러 시도가 이어져왔다. 최근에는 정대철·권노갑 상임고문이 당내 제3차대 구축을 위한 기구 설립, 정 대표 측과 대안정치 측에서 각 1인씩 공동대표로 활동 등의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대안정치 측은 정 대표 및 지도부의 사퇴가 없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

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평화당이 최근 분열을 보이는 것은 뼈아픈 상황이다.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해도 부족한 마당에 돌로 갈라져서 ‘당권을 내려놓아라, 말아라’ 불쌍 사나운 모습을 연출하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며 “그저 모임은 제가 제안해서 만들어진 자리다. 소통을 위해 제안했는데 그 자리는 문서로 저한테 통보, 통촉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분열은 죽는 길이다. 함께 가야 한다. 이것이 김대중 정신을 잇는 상임고문들의 충정이다. 중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방법론이 다르다면 공개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함께 뭉쳐서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민주당, ‘반일감정 수위 조절’ 신중론 제기

서울 중구 ‘노 재팬 깃발 내걸었다 반대여론에 철거  
“지자체 대응은 WTO 규정 위배될 수 있어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최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고조된 반일 감정에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됐다. 도쿄 올림픽 보이콧 등 당내에서 분출하고 있는 반일 여론에 제동을 건 셈이다.

민주당은 7일 서울 중구의 한국관광공사 서울안내센터에서 가진 현장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가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내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나온 도료를 포함한 일본 여행금지구역 확대, 도쿄 올림픽 보이콧 주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전날 서울 중구가 서울시장, 명동, 청계천 일대에 일본 제품과 일본 여행 반대의 의미를 담은 ‘노 재팬(No Japan) 깃발’을 내걸어 논란이 일자 철회한 것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차원의 대응은 자칫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전했다.

당 사무처는 당내 기초단체장협의회 등을 통해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을 통해 서양호 중구청장에게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 한 참석자는 “당에서 직접 지자체에 깃발을 내리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 구청장이 서구청장에게 우려를 전했고 즉각 ‘노 재팬’ 깃발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참석자는 “지자체 역시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대응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현명하게 절제력을 발휘해 대처하고 있는데 정부나 지자체에서 너무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대응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데 대해 짚고 넘어갔고 당 차원의 조치에 대해 보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 역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본 여행 취소 등은 시민들이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라며 “우리는 시민들이 하는 일에 협조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정치권

에서 앞서서 하는 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했다. /뉴시스

평화당, 日 ‘백색국가’ 공포에 “지소미아 파기 못 할 이유 없어”

민주당은 7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공포한 것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대비해야 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도 못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일본이 개과천선할까하는 한 가닥 기대마저 사라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양국 관계의 파국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일제 징용에 대한 배상문제를 경제문제로 비약시킨 일본에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 日,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 ‘금수 품목’ 추가 지정은 안해

28일부터 적용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White List·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달 28일부터 일본산 품목의 수입이 어려워진다. 일본은 애초 우려와 달리 이번 개정안을 공포하며 규제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 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며 ‘수출령 별표 제3차역’에서 한국을 삭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적용하던 우대 혜택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은 공포일(7일)

로부터 21일이 지난 이달 28일부터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며 화이트리스트를 개편했다. 기존에 ‘백색 국가’ ‘비백색 국가’로 나뉘던 분류 체계를 A~D 네 개 그룹으로 바꿨다. A그룹은 기존 백색 국가, B그룹은 ‘수출 통제 체제’에 가입해 일정 요건을 갖춘 국가 등으로 한국은 B그룹으로 분류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다만 내부자율준수규정(ICP) 인증을 받은 기업의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했다. 또 지난 달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에 쓰이는 세 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감광제(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외에 이번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해 추가로 ICP 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제한하는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뉴시스

문화체육관광부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www.firefly.or.kr

제23회 반디의 꿈, 산골생태도시 무주이야기

# 무주 반딧불축제

The 23rd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 일원 | 남대천, 지남공원, 반디랜드, 반딧골전통공예문화촌 등

• 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천위원회 • 주소, 전북 무주군 무주읍 최북로 15 • 문의, 063)320-5004~25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 환경부 • 전라북도 • 한국관광공사 • 한국지역진흥재단

무주군 건강생활 실천 캠페인  
“공공장소에서 금연은 기본입니다”